# 문대통령 "국회 비준 준비" "'판문점 선언' 법제화 속도

# 5당 대표 회동 입법부 설득 추진 민주 "국회 비준으로 제도화 해야" 한국당 강력 반대 속 험로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 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에게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가 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인 만큼 입법부에 협조를 요청하려는 자리를 만들겠다 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 의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 회비준을 잘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 도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고 구체적 합의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 선 상황이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으면 서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준비위 회의에서) 문재 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을 통해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제 국회의 비준 으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가 선언문에 명확 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나타 내는 등 국회 비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법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부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 라는 판단에 따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외교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한중일, 한미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줄줄이 예고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한국당의 부정적 태도도 변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 교섭단체 정례회동에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국가간약속이 비준 대상이다. 여태 남북의 정치적 선언을비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 비준동의에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비준을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에선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이 이뤄져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논점을 흐리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찾으면서 차분하게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준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법 제처에 이번 선언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지 등 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기립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문대통령·김정은 핫라인 첫 통화 언제쯤 할까

### 이르면 주내 통화 할 수도

#### 靑 "시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후속 논의를 위해 언제쯤 '핫라인(직통전화)' 가동에 나설지 주목되다

일단,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통화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과 함께 현재 남북 간의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통화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결정적 국면에서 핫라인을 가동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방점이 찍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지난 30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머지않아 두 분이 통화를 할 것"이라면서도 "통화를 언제 하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특히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 본격화하는 데 발맞춰 남북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 히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재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체감한 미국·중국·일본 의 기류에 대해 김 위원장과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 무이다

무엇보다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핵 화나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북한과 미국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면 실무자급 대화가 아닌 정상 간 직접 통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문 대통령과 소통을 하며 미국 및 주변국의 태도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두 정상 사이에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만 이뤄진다면 핫라인 통화는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 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입의인 내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www.gokseong.go.kr/tour

안내·문의 (061)363-8379

KORAIL

**K → R**∧ IL (주) 코레일관광개발

🌠 |곡|성|군|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JTDA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K water

## "경전선 전철화로 국토 가로축 개발 서둘러야"

#### 국회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경전선 고속 화 사업을 통해 국토 남부권의 신경제권을 형성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의 세로축 과 함께 가로축을 고속전철로 연결해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선 광주~순천구간의 고속전철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관하고 광주·전남·부산· 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신민철 기 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 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 김철수 한국교통대 교수, 정헌영 부산대 교수, 한현 묵세계일보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단순한철도가 아니라 남해안 고속화철도사업의 완성을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면서 "이제 이 퍼즐을 맞춰넣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 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고속전철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82년간 단 한 번도 개 량되지 않고 방치된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은 대 표적인 지역차별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고속철도가 운행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광주~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게 된다"며 "남부경제권 기반구축과 동서화합으로 국가 재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남해안을 경유해 삼랑진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 망으로 110년이 넘도록 동서로 횡단하면서 지역발 전과 영호남 교류에 기여해왔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물류증가로 대부분 구간이 복선전철화 되었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만 광주~순천구간만은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부산까지 하루 한차례 운행하는 열차는 무려 5시간 30분이나 걸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오명을 갖게 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영호남 주민들의 염원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고속전철화사업은 유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논리에 막혀 수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